
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통일기반 구축 -

2025. 1. 16. (목)



통 일 부

순서

I.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	1
II.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	2
III. 2025년 핵심 추진과제	3
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	
②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	
③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체계화·내실화	
④ 국내 통일인프라 및 통일교육 강화	
⑤ 글로벌 통일기반의 저변 확대 추진	
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	12

I.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

- 헌법 제4조의 '자유민주적 기본질서'에 입각한 통일·대북정책 방향 정립
 - 「담대한 구상」 제안('22.8.15.) 및 <8.15 통일 독트린> 발표('24.8.15.)
 - 남북 당국간 <대화협의체> 제안 등 대화에 열린 입장 지속 견지
-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경주
 - 「북한인권보고서」 연례 발간 등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노력 전개, 유엔·주요국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('24.11.7. 北UPR 등)에 인용·반영
 - 북한인권 인프라인 「국립북한인권센터」 건립 착수 및 '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사업'을 통한 시민사회 생태계 활성화 지원
 - △'세송이물망초' 상징 보급('24.2.~) △억류자 관련 한-미-캐 성명('24.9.) 등 납북자·억류자·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·강화
- 탈북민 안전망·보호체계 강화 및 사회적 역량 확충
 - 「북한이탈주민의 날」(7.14.) 국가기념일 제정, 남북한 주민 통합의 전기 마련 및 '정착·역량·화합' 등 10대 후속조치 과제 수립·추진
 - △정착기본금 인상('24년 1,000만원→'25년 1,500만원) △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설 △마음건강 지원체계 등 초기지원 강화 및 촘촘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
 - △일자리박람회 개최('23.12.) △교육지원 대상 확대(제3국·국내 출생 탈북민 자녀까지, '25.4. 시행) △새출발장려금 신설 등 교육기회 확대 및 자립역량 강화
- 국내·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 사업 추진
 - △「북한 경제·사회 실태 인식보고서」 발간('24.2.) △「통하나봄」 주요 지역 개최 등 북한이해 제고 및 문화적 접근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
 - 「통일+센터」 △호남권(목포, '23.9.) △강원권(춘천, '24.10.) 개관 등 통일 행정 종합서비스 확대
 - 「통일·안보 현장견학」 실시(GPS·AR 활용 인증앱 '유니 투어' 출시) 등 통일 시대를 선도할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참여·체험형 통일교육 강화
 - △「국제 한반도 포럼」(GKF) 확대('24.9.) △「글로벌 통일인식조사」 최초 실시('24.9~10.) 등 통일·대북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기반 강화

II.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

- **(국제)** 미중 전략경쟁,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
 - 트럼프 행정부 출범('25.1.)에 따른 미국의 대외 및 대북정책 변화 예상
- **(북한)** '적대적 두 국가 관계' 주장 下 통일 부정, 남북관계 단절 심화
 - 대남 핵사용 위협 및 회색지대 도발 가능성
 - 군사·경제 등 다방면의 대러 밀착과 함께, 불법적 핵·미사일 고도화 지속
- **(국내)** 광복 80년 계기 국민적 통일 의지 결집의 모멘텀 조성
 -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세대 간 인식 격차 극복 필요
 - * '24년 하반기 통일·대북정책 정기 여론조사(통일부) :
통일 관심도 67.4% (△30대 이하 49.6% △40·50대 73.4% △60대 이상 77.2%)

Ⅰ 2025년 업무 추진 방향 Ⅰ

- ◎ **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**
 - 원칙있는 대북정책 기조 견지 및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
- ◎ **인류 보편가치 차원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 전개**
 -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 및 인도적 문제 해결 기반 마련
- ◎ **「헌법」에 기반한 '글로벌 통일역량' 강화**
 - 국내 통일 공감대 확산 및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 지지 확대

Ⅲ. 2025년 핵심 추진과제

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

□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·대북정책 견지

- 북한의 각종 도발·위협·선전선동에 단호하게 대응
 - 유관기관 협업 下, 북한 동향 예의주시 및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
 -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르게 하여, 추가 도발 억제 및 올바른 태도 변화 유도
- ‘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’ 수립·추진
 - <8.15 통일 독트린>의 기조는 지속 견지하면서, 구체적 내용은 정세를 고려하면서 추진

□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

- 대북 전단은 ‘표현의 자유 보장’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한다는 입장 견지
 - 동시에 최근 정세를 고려하여 상황 관리에도 유의
 - * 주요 활동단체 대상 “전단 살포에 대한 신중 판단” 既요청('24.12.12.)
-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충돌 방지에 만전
 - 북한 특이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,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관리

□ 상호 존중에 근거한 원칙있는 남북관계 상황 관리

○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 지속 견지 및 대화 재개 대비

- 남북 간 현안(긴장 완화, 억류자·이산가족 등) 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화 지향
- 남북대화 재개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상시적 대비역량 강화

* △남북대화 모의훈련 △상시적 회담전략 자문 등 실시

○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조치에 엄정 대응

- 북한의 3대 침해조치(개성공단, 금강산, 철도·도로)에 대한 기본입장 견지, 법적 조치 검토 및 대응
- 신규 침해조치 발생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 下 적시 대응

○ 남북관계에 대한 다양한 대국민 의견수렴 및 소통 강화

- 개성·경협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및 안정적 관리
- 역사·종교·체육 등 분야별 민간 사업 추진 관련 소통·협력 강화
- 남북회담 사료 공개(상·하반기) 및 사료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

□ 미북대화 대비, 한미 간 정책 조율 강화

○ 미국 新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, 「담대한 구상」을 토대로 '북한의 완전한 비핵화'를 위한 공조 강화

○ 유관기관 협업 下 미 의회, 싱크탱크 전문가 등 대상 아웃리치 추진

②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

□ 북한인권 개선 기반 구축 및 콘텐츠 개발 강화

- 북한인권 관련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「2025 북한인권보고서」 발간
 - 하나원 교육생 전수조사를 통해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 등 수집
 - 북한인권 실태의 종합적·심층적 파악을 위한 조사대상 확대 병행
- 「국립북한인권센터」 건립 사업(2차년도)의 안정적 추진
 - 토지매입 및 건축설계 완료 후 상반기 내 센터 착공(‘26년 완공 목표)
 - 전시공간 구상,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콘텐츠 구성·운영 준비도 병행

□ 국내외 북한인권 생태계 확장 지원

- 유엔 인권이사회 등 계기 「북한인권 국제회의」 개최를 통한 북한인권 국제 연대 강화
-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한 북한인권 민간 생태계 활성화
 - △신규·탈북민 단체 접근성 강화 △2030세대 활동가 양성을 위한 다년도 사업 등 지원방식 다양화
- 젊은층 관심 및 참여 제고 등 저변 확대
 - 토크콘서트 형식의 「북한인권 상호대화」를 통한 젊은층 접근성 제고
 - 북한인권·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* 운영

* 외국인 대상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저명인사 영어강의 및 현장견학 기회 등 제공

□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협력 지속 추진

- 국제기구·전문가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, 여건 조성시 영유아 영양·백신 등 취약계층 지원 우선 추진

* '25년 인도적 지원 예산 증액(구호지원 +159억원, 영유아 및 보건의료 지원 +1,200억원)

○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·환경분야 등 협력에 대한 북한 참여 방안 모색

□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및 이산가족 교류기반 구축

○ 해외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및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

- 해외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 제작 및 유전자검사 확대('24년 27명 → '25년 100명)

- UN·국제적십자위원회(ICRC) 등 활용, 국제사회에 이산가족 문제 지속 제기

○ 이산가족 생애기록 아카이브 구축 기반 강화

-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 수집·관리 체계화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 (상반기),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개선 등

□ 납북자·억류자·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

○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및 주요 국가·기관과의 연대 확대 노력 전개

- △유엔 북한인권조사위(COI) 후속보고서 △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등에 핵심내용 반영 노력 지속 및 유관국 협력 강화

○ 우리 국민 인식 제고 및 지지 저변 확대를 위한 지자체 협력 강화

- △제1회 「6·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」(6.28. 법정기념일) 행사(통일부·지자체·민간단체 T/F 운영) △고교생 납북자 송환기원비 건립 1주년 행사 등 개최

○ 「국립6·25전쟁납북자기념관」을 통한 납북자문제 관련 공감대 확산

- △전시납북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·교육 △납북자 가족 초청행사 개최(5월) △유관기관(파주시·경기관광공사 등) 연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

3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체계화 · 내실화

□ 북한이탈주민 자립·자활을 위한 교육·일자리 기회 확대

○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지원 강화

- 학자금 지원 대상을 제3국·국내 출생 탈북민 자녀로 확대('25.4월~)
- 한미대학생연수(WEST) 등 탈북청소년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 확충
* 호주 어학연수 재개 추진, 영국문화원 제3국 출생 자녀 영어교육('24.12월 재개) 등
- 한꿈·여명학교 교사(校舍) 이전 지원 등 대안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진

○ 질 좋은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정성 강화

- △정부·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솔선수범 및 평가지표 강화 △탈북민 채용기업 인센티브 확대(세제 혜택,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) 추진
- 창업보육센터 신설, 창업·귀농·귀어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
- 탈북민의 취업 의지 제고를 위한 새출발장려금('24.11월 신설) 본격 운영

□ 북한이탈주민 대상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

○ 탈북 여성 일·육아 병행 지원

- 탈북민 가정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
* 「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」에 관련 내용 추가, 정책 수립 기반 확충
- 탈북 여성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등 지원방안 적극 모색(여가부 협업)

○ 고령 탈북민,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

- 탈북민 고령화 추세를 반영, △국민연금 조기 가입 지원 △지자체 협력 통해 고령 탈북민 '쉼터' 마련 등 추진
- 복지 사각지대 탈북민 대상 특화된 위기관리체계* 운영

* '23년부터 운영중인 고독사 예방사업("똑똑! 안녕하세요") 확대 실시(수도권 → 전국)

- 민관 협업을 통한 탈북민 「마음건강 지원체계」의 체계적 운영
 - 권역별(서울, 인천, 강원 등) 구축된 마음건강 지원 시설 간 협업 강화
 - * △「마음숲」(20, 서울) △「마음소리공감상담센터」(23, 인천) △「하나마음쉼터」(24, 강원) 등

□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기반 확충

- 중앙-지방정부, 민간이 함께하는 정책공동체 형성
 - 정착지원협의회(위원장: 통일부차관) 산하 중앙-지방협력소위원회 신설 등 지자체와 정책 소통 강화
 - 탈북민 및 관련 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 신규 발족
-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처우 획기적 개선 추진, 탈북민 현장지원 역량 강화
 - 사회복지시설화 추진, 관련 기준에 부합되도록 시설·인력·운영 체계 개선
-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을 창업·자격증 취득 등 실용적 과정으로 개편
 - 기초 교육생 대상 취업 외에 창업·영농 교육 프로그램 신설
 - 사회정착 탈북민 기술자격증 취득과정* 및 자격증 활용 실무과정 강화
 - * 15개 탈북민 적합 직종을 선정, 국가(민간) 기술 자격증 대비 필기·실기과정 운영

□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사업 강화

- 탈북민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
 - 광복 80년 및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(7.14.) 계기 지자체 협력 등 전국적인 탈북민 인식 개선 활동 장려
 - 탈북민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콘텐츠 확대 등 '동행' 프로젝트 추진
- 「남북통합문화센터」 내 탈북민 활동 확대 등 남북 주민 소통·교류 촉진
 - 센터 개관 5주년 계기 다양한 공연·행사·전시 추진
 - * △남북생애나눔 대화 △미리 보는 통일공연 △탈북 예술작가 작품 기획전시 등

4 국내 통일인프라 및 통일교육 강화

□ 통일 관련 인프라 지역균형 발전 및 다각화

- 경기권(의정부)·충청권(홍성) 「통일+센터」 2개소 추가 신설(전국 총 5개소 운영)
 - △영남권·제주권 설치 수요조사 △센터 운영 제도화·체계화
- 통일·북한전문 복합문화공간 「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」(고양시) 공사 추진
 - 정보시스템 기본설계 및 열람공간 디자인 등 운영 준비 병행
- 접경지역 외 지역에 '통일미래 체험연수 시설' 추가 설치 검토

□ 평화경제특구 조성 본격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체계화

-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확정 및 기본계획* 수립
 - * 기본계획은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거쳐 하반기 공개, 국내외 특구 사례조사 병행
- 특구 관련 협의체 및 전담기구 구성·운영 등 지원 체계 구축
 - △특구 위원회 운영 내실화(주요사항 심의·의결, 연내 2회) △지자체·유관부처 상시협의체 운영(연중) △전담기구 설치('평화경제특구TF', 1월~)

□ 광복 80년 연계 통일 공감대 사업 확대 및 북한이해 제고

- 광복 80년 기념 '국민참여형 통일 공감대 형성 사업' 추진
 - 「통일기원 마라톤」 및 공연·전시·체험형 통일문화행사 「통하나봄」 개최
- 민·관 협업을 통한 통일미래비전 인식 제고 및 담론 확산
 - △통일인식 제고방안 연구 △경제계·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협업 확대 △지역별·세대별 맞춤형 설명회 개최 등
- 미래세대 맞춤형 북한이해·통일인식 외연 확대 프로그램 운영
 - △탈북민-청년세대 토크콘서트 개최 △「K의 공식」 채널 활성화

□ 통일연구 플랫폼 활성화 및 통일법제 연구·정비

- 체계적 통일연구 플랫폼 구축으로 통일연구 기반 강화
 - 국책연구기관*, 대학, 민간연구소 등과 네트워크 강화 및 협업사업 추진
 - * '24.10월 통일부경인사 통일미래연구단(15개 국책연구기관) MOU, 정례회의공동학술회의 예정
- 민·관 협업 하, 통일법제 중장기 과제 연구 등 법·제도 정비 노력 경주
 - 분기별 통일법제추진협의회, 통일법제 유관부처 공동 학술회의 등

□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을 통한 미래세대 통일인식 제고

- 미래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'AI 기반 통일교육' 도입
 - △ AI 통일미래 콘테스트 개최 △ AI 통일교육 강좌 개설 및 교수법 개발 지원 △한반도통일미래센터 AI 로봇 도입 및 체험관 리뉴얼 등
- 통일미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'실감형(VR·AR) 통일교육 콘텐츠' 확충
 - 전국 학교 대상 시연, 상설 체험공간 확대* 등 콘텐츠 보급·확산
 - * 기존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외에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전국 통일관으로 단계적 확대
- 탐방과 교육을 결합한 「통일·안보 현장견학」 프로그램 확대 운영
 - 남북한 출신 청년이 함께하는 '글로벌 통일체험*' 추진
 - * 통일 경험국, 체제 전환국 등을 방문하며 통일의 가치 체험 및 국내외 확산

□ 미래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통일교육 생태계 활성화

- 공직자, 청년세대, 탈북민 등 사회 각계각층 통일준비 인력 확충
 - △차세대 통일전문가, 탈북민 전문강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
 - △통일교육 의무 이수대상 확대 추진(현행 공무원·공공기관 직원→초중고 교사까지)
- 학교, 지역거점과 연계한 통일교육 생태계 활성화
 - △통일교육 연구(중심)학교 내실화 △통일교육 선도대학 확대 등

5 글로벌 통일기반의 저변 확대 추진

□ 통일·대북정책 국제협력 강화

- 미국·일본·독일 등 기존 유관국 협력 공고화
 - 미국 新행정부 출범 관련 대미 통일·대북정책 아웃리치 적극 실시
 - 고위급 교류 중심 한독 통일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확대·강화
 - * 제14차 「한-독 통일자문위원회」 개최 계기(25년 독일) 협력 의제 다변화 등 발전안 모색
- EU·호주·아세안 등 '신흥 통일협력국'으로 협력대상 단계적 확대 유관기관 협업
 - EU·호주 등 대상 고위급(장·차관) 국제통일대화 신설
 - 아세안·글로벌 사우스 대상 국제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

□ 국제사회 통일 공공외교 확대

- 「국제 한반도 포럼(GKF)」을 통일 공공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
 - △의제 다변화 △참여국 확대 △청년세대 참여 등 완성도·효과성 제고
-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「글로벌 통일인식조사*」 연례 추진
 -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및 국내외 통일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축적, 통일공공외교 확대의 기반 마련
 - *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, 8개국(미국·일본·호주·영국·프랑스·독일·베트남·폴란드) 약 9천명의 세계시민 대상 한반도 통일 관련 온라인 설문 조사 최초 실시
- 문화적 접근을 통한 재외동포·외국시민 통일공감대 강화 노력 지속 전개
 - △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(2회) △재한 외국인 청년 세미나·현장견학 등
 - 국제사회 통일거점으로 기능할 해외 「통일+센터」 설치 방안 검토

□ 통일업무 국제화 역량 제고

- 해외 주요 연구기관·연구자와의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·확대
 - * △해외 연구기관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사업(2년차) △해외 전문가 여론주도층 현지활동 지원
- 통일 이슈의 국제적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역량 확충 추진
- 학위과정·펠로십 등 해외 신진 북한 연구자 발굴·육성 지원

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

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

탈북민 정착기본금 인상



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

입국 내 5년 가입기간 제한 폐지

육아·학업·질병 등으로
기한 내 가입 못한자 구제

“뚝뚝! 안녕하세요” 확대 실시

위기 탈북민 대상
특화된 지원사업 운영

수도권
↓
전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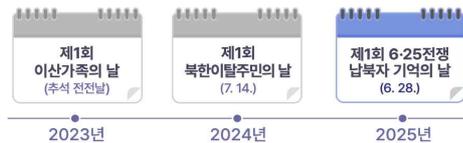
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

해외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제작 및 유전자검사 확대



‘납북자 문제’ 국민공감대 형성

제1회 『6·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』 법정기념일 행사 추진



통일 인프라 강화

통일+센터

경기권(의정부·충청권(홍성))
2개소 추가 신설
(전국) 3개소 ▶ 5개소 운영



해외 ‘통일+센터’
설치 방안 검토



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(고양시)

공사 추진 ▶ 2027년 완공 목표

국립북한인권센터

상반기 내 착공 ▶ 2026년 완공 목표

통일미래 체험연수 시설

접경지역 외 지역에 추가 설치 검토